

#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공포정치하의 수탈경제와 그 반동성

동경경제대학교 교수 유진경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공포정치하의 수탈경제와 그 반동성

동경경제대학교 교수 유진경

## 1. 문제와 그 분석 각도

본문의 목적은 대만이 전후 백색공포시기에 전제정치의 경제기초를 분석하여 그 구조와 기구 및 그 반동적 성격과 본질을 밝히는데 있다. 소위 반동정치라 함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회의 진보적 성향과 배치되는 것을 말하는데 혹자는 역사 현대화의 발전적 동태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말한다. 소위 정치적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면 반민주자유, 반인성인권, 반 현대화의 제도 구조 및 그 실행 조치 등을 모두 반동 개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시장조절 기능과는 반대로 강권으로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공포정치를 이용하여 경제체제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반동경제이다.

대만의 전후 경제는 1945년 부터 1960년대말까지 백색공포의 큰 특징을 가지는 시기로서 정부가 쌀 사당수수농업과 공영경제(공업·금융·유통) 그리고 군사제정의 셋방면에서 시장·화폐경제체제가 도퇴되는 것에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농공인민 대중을 강권으로 수탈하며 항공산업은 보호하여 전제 공포정치를 공고히 하는 것은 소위 독재체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사 발전관점에서 보건데 일본통치하의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가 국민당 일당 독재하의 반봉건성으로 전도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전근대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한 개의 역사반동이 도퇴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경제 측면에서 보건데 일종의 사회 강제 누적과정으로, 기업자본 측면에서 본다면 한 개의 자본원시 누적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체제의 기본 개념을 이 글에서는 수탈경제(Squeezed economy)라는 단어로 표현하겠다.

「수탈」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일반적인 의미는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화를 강요하여 소위 경제개념 즉 탈취·약탈·약취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혹자는 잉여노동가치도 이야기 한다. 수탈은 여기에 또한 두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외적 강제성의 수탈로서 예를 들면 토지세나 세금 등의 징수 수단을 통하여 약탈하는 것도 반드시 일종의 수탈에 속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 처럼 국민당 정부는 미당농업에서의 수탈수단도 약탈과 착취를 포함하며, 공영경제의 수탈수단은 시장교환 관계를 기초로 착취하였으며 군사세원의 수탈도 사회적으로 환원 작용 없이 완전히 약탈을 통해서 단행되었다. 총괄적으로 말해 이 일련의 시기 대만의 경제 특징은 바로 인민을 수탈하였던 경제이며, 가령 이렇게 권력의 수중에 집중된 재화는 한편으로는 반공군사 정권의 공포통치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량 공상기업이 자본을 누적하는데 사용되어 독특한 독재를 각색하는데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시기의 개발독재가 이후의 대만 경제를 고도로 성장시켜 지금의 사회적 풍요를 이루는 데 공헌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반동성을 정당화·합리화 심지어는 미화하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사 발전이라는 것은 변증법인 변화의 과정이며 훗날의 한 시기의 발전이 왕왕 전날의 한 시기와 연결·부정·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좋은 원인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나쁜 원인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역사발전의 인과관계는 진보의 결과가 종종 앞의 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얻어지는 것이다. 1950년대 수탈경제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수탈 독재 통치체제를 정당화·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량한 자본이 불가능하게 되어 객관적으로 그 내부에서 수탈독재를 부정하는 사회역량을 배양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가져온 백색공포기의 반동수탈경제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미화할 이유가 없을 뿐 만 아니라 해서도 않되며 오히려 그 시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 족적을 비판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는 역사발전의 변증법칙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 착오는 다시 변할 수 있으며 역사적 교훈은 반드시 좋게 받아들여 백색공포하의 수탈경제적 반동성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고 파헤쳐져야만이 훗날 모범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하는 방향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먼저 역사재판적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문제를 볼 것이다. 다음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 특히 수단의 관찰에 치중하여 수단의 관찰로부터 목적의 주제적 성격을 이해하여 그 본질에 접근하는데 역시 실증적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표방하는 목표는 모두 숭고하고 완전한 선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채택되는 정책 수단 -혹자는 제도 기구의 실천 작용이라고 말하지만-이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가권력 성격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수단적 측면에서 깊이 토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국민당 정부가 백색공포시기에 표방하였던 반공이념은 민주·자유·인성·반독재·반잔학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만의 현실은 공교롭게도 정반대로 계엄체제하에서의 전체독재·공포·비인성사회였다. 구호와 현실·목적과 수단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양두구육의 파렴치함도 있었다. 즉 미국 또한 예외로 되지않는데 미국도 민주·자유·인권을 표방하였지만 당시 대만의 공포정치의 현실에 대해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고려하여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여 눈 감고 용인하였으니 어찌 민주·자유·인권의 이념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역시 수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백색공포 시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퇴색되었는지는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서 각기 설명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깊이 빠지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대략 1950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일단의 시기를 그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2. 수탈경제(Squeezed economy)의 역사 시대적 배경

백색공포시기는 국민당정권이 광대한 인민 대중에 대해 수탈경제체제와 기구를 형성한 것은 필연적으로 그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반인민·반민주·반인성·반현대적 사회경제 제도는 반드시 내외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 의거하거나 혹은 기생하여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대만의 시대배경과 조건은 대체로 크게 세 방면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즉 대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일본식민지 경제의 잔재와 대륙의 국민당 정권의 성격과 내전이라는 비정상적인 형세하의 체제 그리고 국제간 동서 냉전의 반공체제의 제약 등의 세가지 요인이다.

첫째, 일본식민지경제체제의 잔재 요인에 관하여. 우리는 수탈경제체제가 공영경제 체제의 확대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의 공영경제 체제는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였던 독점자본을 완전히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 것은 장차 거의 국유화되었다. 예를 들면 부족함이 없는 미곡량식관리체제는 일본총독부가 전시에 사용하였던 양식통제 배급제도를 개편하여 계승한 것이고, 대만 당업공사는 일본인들의 당업 독점자본을 통합하여 만든 것이며 기타 중요한 기간 산업 및 금융·무역기구는 대부분 일본이 만든 것을 접수한 것으로 그 숫자를 다 들 수 없다. 일본이 대만에서 이루었던 중소기업은 모두 통합하여 공광업과 농림업 두 개의 공사로 통합개편되었다. 이 공사들은 공영에 부적합하여 1953년에 비로소 토지개혁을 할 무렵에 시멘트·제지업 두 공사를 민간에 이양하였는데 전체 공영경제를 보건데 그다지 큰 규모도 아니며 중요하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바, 수탈경제체제에 의거한 공영경제 체제는 모두 일본식민지 경제체제의 잔재 위에 건립된 것이며 식민지경제가 공영경제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처럼 수탈경제도 그 성립조건을 상실하였다.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 조건은 대만 본지 민간자본이 미천하였고 이 시기에 일본들이 남기고 간 현대산업경제를 맞을 힘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신정부의 대규모 국유화 조치에 대한 저항력도 없었으므로 점유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민작자본 역량의 박약한 원인 또한 식민지 통치의 결과였으며 일본 식민지 통치의 피해는 이루 비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국민당정권의 체질과 중국내전과 연이어진 비정상적인 형세는 수탈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둘째, 국민당 정권의 성격과 중국 내전이라는 비정상적인 형세의 규제에 관하여.

이 문제는 먼저 '국가자본을 발전시키고 개인자본은 절제하라'는 손문의 민생주의 지도 이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당 정부는 이 지도 이념에 의거하여 공영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훗날 이 이념은 그 본래의 합리성을 가지게 되나, 문제는 국민당 정권이 '국가자본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천한

구체적인 표현은 오히려 1930년대 및 항전시기 중경 정권하에서 성장한 중국 관료주의체제였으며 4대가족이 핵심이 되어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4대1당의 수탈경제를 돈독히하게 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격의 정권 정책이 전후 대만에와서 연장되었고 제일 먼저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산업을 국유화하여 공영경제를 창건하였고 후에는 내전이라는 비정상적인 시기를 이유로 수탈경제를 강화하고 가렴주구를 일삼고 전후에는 대만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만들었으며, 심지어 국민당의 중앙이 대만으로 온 이후에는 이 정권의 정책 성격과 결탁하고 거의 아무런 변화없이 1950년대에 백색공포시기의 대만수탈경제위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당농민에 대해 강권으로 수탈하고 공영 경제의 이윤을 독점하고, 군비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권제는 비교하여 후에 다시 상술하겠다.

세 번째로 동서 냉전 반공체제에 관하여는 국제 요인에 속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항미원조를 위해 참전함으로써 극동지역은 동서냉전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미국은 중국 대륙을 봉쇄할 정책을 발동하기 위해 대만, 일본, 한국 및 월남등 동아시아의 반공국가들과 결함을 더욱 돈독히 하고 대규모의 대외경제군사 원조를 전개하였다. 미국의 대외원조는 자국의 안전과 외교이익을 위해 단지 반공정권에 대해 군사경제 지원을 하였는데 반공군사정권의 독재전제에 대하여도 비민주적, 비인성적 잔학한 조치도 좌시하며 간섭하지 않았다. 대만에 대한 경제 원조도 주로 공영기업에 이루어졌으며 간접적으로 수탈경제체제를 지원하였다. 심지어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던 한중의 국민당 통치집단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아무거리낌없이 백색 공포통치를 단행하여 인민을 수탈하여 동북아 지역의 독재 전제의 극우 반공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전형을 이루어 냈다. 이렇게 보건대 냉전체제하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반동체제가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본·대륙과 미국의 세 측면에서의 역사 사회 및 정치군사 요인이 깊이 영향을 미쳐 당시 대만의 백색공포하의 사회경제 체제를 규획하였다. 우리가 쉽게 언급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와 눈앞의 형세를 서로 비교할 때 오히려 작건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소이 말하는 역사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즉 역사가 과거이며 또한 현재와 미래이다. 이하에서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기간에 국민당정권의 농민들에 대한 수탈 및 공영경제를 통해 인민대중에 대한 가중한 세금징수의 수탈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백색공포정권의 물질적 기초와 그 반동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미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논증이 있었으므로 그 개요를 약술토록하겠다.

## 3. 미당농업 통치하여 벼 사탕수수 농민을 수탈하던 기구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대만사회경제는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농업중에서도 벼와 사탕수수의 두가진 작물이 그 근간을 이루었는데 국민당 정권은 이 미당농업에 대하여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주요 농산품과 농민의 노동 잉여가치를 장악하였다. 당연히 미곡과 사탕산업의 통제방법은 서로 같을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나누어 검토하여야되므로 먼저 미곡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벼농사의 수탈기구에 대하여 - 비료와 곡식을 교환

귀납식량 징수정책은 대체로 3가지 방법과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조로 실물미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무상징수로서 탈취적 수탈 범위에 속한다. 두 번째는 강제로 미곡을 수매하는 방법이다. 즉 시장에서 공정가로 미곡을 수매한 후 다른 가격으로 강제로 교환하게 하는데 탈취와 약탈 범위의 수탈이다. 세 번째는 실물교환 방법으로 주로는 비료와 미곡을 교환한다. 비료는 당연히 정부가 독점하여 공급해야 하므로 교환비율 또한 공정해야하는데 서로 다른 가치로 교환한다. 이는 탈취범위의 수탈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방법은 화폐경제를 도퇴시켜 실물경제로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경제에 위반되며 자본주의 및 현대적 의미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식량징수 정책의 세가지 방법중 바로 이 실물교환통제 경제가 주요한 부분으로 또한 이것은 대표적인 농민수탈정책의 반동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만의 전후 식량통제는 일본의 항복과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1945년 10월 신정부는 일본이 전시에 만들었던 양식통제 방법을 기초로 하여 「식량관리 임시 변법」을 공포하였다. 1946년 7월에는 「대만성 전조식물실시 변법」을 공포하고 같은해 제2기 작물부터 식물지대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11월 「대만성 식량국」을 설립하여 식량통제를 전담 관리하였다. 1947년 7월 다시 「대만성식량수매 변법」을 공포하여 식량강제 수매를 강행하였다. 1948년 9월 「대만성 정부 화학비료배급 변법」을 다시 공포하여 비료와 곡물의 교환제도를 실시하였다. 상술한 세가지 방법의 식량징수 정책을 일찍이 전후에 오래지 않은 기간동안 이미 개정하였다. 이 식량징수정책과 제도는 국민당정부가 중경시대의 전시 시대에 수립한 경제정책을 그 연원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 식량징수의 수탈경제는 대만식민지 경제의 잔재와 대륙전시통제경제의 결합체로 볼 수 있다.

1952년 대만인 실시한 「耕者有其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4만 3552갑의 농지가 10만 6049호의 지주로부터 19만4823호의 전농으로 옮겨졌다. 이 제도는 확실히 소농의 농업생산력을 제고시켰고 낙후한 식량생산을 증가시켰고 정부의 식량징수 규모는 이와 더불어 확대되어 1950년대의 농민들로 하여금 수탈기구를 수량상 확대시키고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수량 방면에서 식량농수탈의 정황을 살펴보겠다.

예를 들면 표 1을 살펴보면 1951년부터 1965년 15년간 정부의 식량징수의 정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총체적으로 보건데 매년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정부는 각종 명목과 방법으로 징수하여 쌀의 총량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여 총생산량에 대한 비율이 30% 전후로 늘어나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크졌다. 징수 방법도 상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수취와 수매 그리고 교환의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료와의 교환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 총수의 2/3(66.3%)를 점하여 식량 징수 수단의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 강제수매가 14.2%, 그 다음으로 세에 따른 수매가 13.7%를 차지하고 기타 방법등이다. 세에 따른 수매부분은 무상으로 징수로 이루어졌는데 기타 두가지는 시장가격기구를 통한 징수로 주로는 가격의 차이를 통한 착취하였는데 먼저 비료 교환 양곡의 수탈 관계를 살펴 보겠다.

이 시기 대만의 비료는 국내 생산(대만비료공사) 혹은 외국 수입된 것이던 모두 성식량국을 통해서 통제되었다. 비료 곡물 교환의 비율(중량으로 계산) 1대1로 이루어 졌는데 즉 농민은 1킬로그램의 쌀을 가지고 식량국에서 비료 1킬로그램을 교환한다. 이 기간 비료 공급의 정황은 표2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60%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수입 비료의 매톤당 가격은 그림 1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국산비료보다 가격이 싼으므로 곡물 가격의 1/2내지 1/3정도 이다. 큰 폭이 이윤이 발생하였음이 명확한데 이 차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농민에게서 수탈하였던 구체적인 형태이다. 정부가 수입한 비료의 비용은 얼마인가? 후에 다시 제기하겠다.

다음으로 강제 수매의 수탈 관계를 살펴보겠다. 식량국이 농민들에게 징수가격을 공정하게 하려던 적어도 자유 시장가격으로 되어야 한다.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정가격은 대략 자유가격의 2/3정도로 같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식량수탈의 구체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비료를 수입하고 일부분의 쌀을 수출하여 외환을 그두어 그 돈으로 비료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관계는 표3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 1952년부터 1965년 까지 수입된 비료의 양은 455만톤으로 가격은 모두 2억 7044달러인데 같은 기간 동안 대만이 수출한 쌀의 량은 191만톤으로 2억7700달러로 양자 간의 금액이 비슷하다. 이것은 하나의 우연으로 어떤 계획의 평균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91만톤의 쌀의 량은 계산해보면 정부가 징수한 미곡 총량의 대략 20%가 된다. 이것이 바로 비료 환곡의 범위에 속하는데 다시 말해서 강제로 수매한 량에서 정부가 징수한 도곡량의 전체 부분이 된다. 총체적으로 말해 대략 징수 총 도곡량의 1/3에 해당 되는 데 2/3는 무상으로 수탈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정부는 매년 총 도곡량의 대략 30%를 징수하고 그 중 20%는 무상으로 수탈하는 것으로 그 규모의 막대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정부 징수 식량의 용도는 수출하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군량미로 공급되며 군사재정으로 지원되며 일부분은 시장 쌀 값조절과 재해를 대비해 비축해둔다.

위에서 언급한 바를 종합하면 식량징수정책중 은밀하게 도농을 수탈하는 기구중 가장 주요한 수단

은 비료 환곡으로 화폐경제를 도퇴시키고 실물교환을 채택하여 수탈에 이용한다. 무상 약탈은 도곡 총량의 20%를 실물로하여 도농의 잉여가치를 강요하여 농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군사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고 낮은 공업자본을 유지시키며 한편으로 항공공업의 자본을 누적시켰다. 바꾸어 말해서 화폐시장경제를 도태시키고 농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군사재정을 지원하여 군사전제 독재체제를 공공히 하였다. 식량징수 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농수탈경제의 반동성 및 그 기간 국민당 정권의 반동의 본질이다.

(2). 사탕수수 농가에 대한 착취구조 - 加工分糖制

사탕수수재배는 대만상품농업의 대표작물로 역사가 오래되고, 벼재배와 더불어 대만상품농업의 쌍벽을 이루어 왔다. 전후, 일본인이 남기고간 4대 제당업독점자본이 전부 국유화되었고, 대만제당공사로 조직이 통일됨에 따라, 사탕수수재배농민의 지배관계가 전쟁전보다 더욱 공고히 되었고 식량국과 벼재배농민의 관계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긴밀해졌다.

제당업의 재생산구조는 사탕수수재배, 설탕가공, 시장판매의 세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대만 제당업 사탕수수재배의 80%가 경지규모가 채 1헥타르에 못미치는 개체소농에 의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만이 제당공사의 농장에서 담당하고 있다. 설탕가공으로 말하자면 전부 대만제당공사의 하청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시장판매는 정책제도를 통하여대만제당공사의 전반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탕수수 원료공급의 80%인 사탕수수재배농가는 바로 대만제당공사(정부)의 통제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주요방법이 바로 加工分糖制인 것이다.

사탕수수 재배생산의 사탕수수 원료는, 반드시 제당공장에 팔려서 가공이 되어야만 비로소 설탕이라는 제품이 될 수 있다. 가공분당제는 바로 이 과정의 대만제당공사와 재배농민의 경제교환관계와 방법이며 다시말해서 사탕수수 재배농가의 원료를 제당공장에 팔고, 일정한 비율에 의해 완성품인 설탕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대만제당은 가공 및 기타 소비의 댓가로 또다른 부분의 설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가공분당제도 일종의 화폐경제에서 실물교환경제로의 퇴보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설탕을 나누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대만제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밖에도 사탕수수 재배농가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의 절반 이상을 규정에 의해서 대만제당이 수매해서 국제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실물교환관계 및 수매를 강제하는 방법은 稻穀徵收란 수단의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쌀과 설탕 착취경제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 개관을 살펴보자

1950년 대만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대략 9만 헥타르 정도고 사탕수수 원료의 생산은 매년 약 650만톤, 가공을 거쳐 설탕으로 만든 것이 약 75만톤으로 그 중 80%의 생산량을 15만 가구의 재배농가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농가의 경지규모는 0.5헥타르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대만제당은 사탕수수 재배농가에 대해 압도적인 착취관계를 갖는다. 그 착취관계는 설탕가공 비율과 수매가격을 강제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설탕가공비율에 대해서는 표4에서 보이듯이 농민과 대만제당공사가 약 50% 정도로 나누어진 다. 즉 재배농민은 사탕수수 원료를 제공하고, 완성된 설탕의 반을 가공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반만 가질 뿐이다. 이러한 교환관계가 공정한 교환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당공장은 면밀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 기계제공업으로 가공원가가 그렇게 높을 수 없다. 일제시기 제당업공사의 제조비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20%를 초과하지 않았다. 설탕 50%의 배분비율 중 사탕수수 원료의 수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비율이 높을 수 없다. 따라서 농민과 공사 간의 50%대 50%의 가공배분비율은 확실히 불공정교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배분비율은 대만제당의 일방적 결정의 독점성 비율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이것은 곧 일종의 독점적인 가격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농민에 대한 착취관계는 이 배분비율과 결정과정의 독단성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수매방법과 가격의 강제에 대해서이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사탕수수 농가의 몫인 설탕을 자유롭게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대만의 설탕수출시장이 엄중한 제약을 받던 1949-54년 사이에는, 대륙에서 후퇴한 뒤 대륙시장을 잃어버린 데다, 그것을 대체할 국제시장을 찾기 어려웠던 시기여서 농민들은 30-40% 만을 내다 팔 수 있었다. 그러나 1955년 일본시장이 회복된 후부터 제재가 시작되어, 나머지 농민들은 30-40% 만을 내다팔 수 있었다. 농민들의 설탕은 대·당에서 강제로 수매했고, 그것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 시기 대·당공사의 경영목표는, 정부가 돈을 버는 것을 위해 이윤을 독점하는 것 외에도,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는 것이 큰 임무였다. 대·당은 일정 수량의 수출용 설탕을 수매해야 했기 때문에, 수매가격 면에서 재배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비재배와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농민이 사탕수수 재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대·당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시 표4를 보면 50년-53년 동안은 설탕수매가격이 쌀값과 일치하는 이른바 斤米斤糖 관계 시기고, 이후에는 국제설탕가격의 기복과 쌀가격의 동태를 참조해서 설탕수매가격을 결정했다. 사탕수수재배와 쌀재배간에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있는데 농민 수입면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정한 수량이 사탕수수 원료공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만제당공사의 최대이윤과 무역수지흑자 목표를 달성했다.

대만제당공사의 농민 설탕 수매가격은 비재배농민의 수입과 균형을 고려해서 결정되었고 표면상으로는 불공정하거나 착취관계인 것 같지 않았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첫째 수매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착취성을 지닌 것이고 둘째 설탕가격의 개정은 쌀가격을 기준으로 평준화되었으나 쌀가격은 성식량국의 저가정책의수준안 완전히 규제되고 그 불공정함과 약탈성이 위와 같이 제기되었다. 쌀가격이 이미 착취관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농민 설탕수매가격의 구조는 더욱더 정부의 농민에 대한 착취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고 설탕수매의 착취적인 성격을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탕과 쌀의 규제는 모두 정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綜上分糖制와 농민 설탕 강제수매정책의 전모와 대만제당공사와재배농민간의 설탕분배와 시장유통 상황은 대략 3번 도표에서 개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만제당공사 자체 공급은 설탕 총량의 20%이고 나머지는 80% 중 가공분당제에 의한 사탕수수재배농가가 40%를 차지한다. 사탕수수재배농가가 마땅히 가져야 할 농민설탕의 40% 중에서 대만제당공사이 다시 강제수매방법으로 10%를 가져가며 나머지 15%가 농민의 뜻대로 국내시장에서 판매된다. 따라서 대만제당공사는 설탕 총생산량의 85%를 수집해서 해외로 수출해 이익을 남길 수 있고, 15%의 농민 설탕이 국내 소비에 공급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만제당공사는 1955년 다시 국제시장이 열린 후 64년까지 10년 동안 35억 700만 원(중국돈)의 이익을 남겼고 법인세 15억 9천만원, 설탕세 24억 8천만원, 기타 세금 16억 1천만원 등 모두 92억 5천원--년평균 9억 3천만원--을 국고에 납부했다. 또 다른 면에서 설탕수출수지는 합계 8억 300만 달러고, 연평균 흑자 8천만 달러로 이 액수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금액과 차이가 없었다. 사탕수수 재배농가로부터 착취한 재산이 충분히 거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대만농업의 조건 아래 농민들은 비재배와사탕수수 재배, 두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작물은 성식량국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제당공사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사실 둘 다 모두 국민당 국가자본의 일환으로 국민당 전제통치의 경제기초이고 쌀과 설탕의 통제경제는 한몸처럼 농민인여노동가치를 착취하기 위해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쌀과 설탕의 착취방법의 공통점은 실물교환과 강제수매에 있고 이것은 화폐경제를 역행하는 것이다.

상품시장경제의 발전은 역사진보에 반하는 전근대 체제다. 일본식민지하에서 제기된 대만농업의 이른바 米糖相剋의 모순관계는 전후 쌀과 설탕 상극관계의 소실은 국민당 국가자본의 착취경제의 선상에서 통일되었다. 쌀과 설탕 생산이 시장에서 경쟁작용을 나타내며 즉 농민은 비재배와 사탕수수재배의 선택을 통하여 자본을 제어하는 기능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농민이 국가자본 전반을 대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독점 방식을 띠게 되고 약탈과 착취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된다. 마침내 국민당 정권은 한편으로는 농지개혁을 실시해 농지를 농민에게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쌀 설탕 착취경제를 추진하여 농민 노동성과를 약탈하는 정치 위선적인 행각을 벌인다. 그 본질은 반농민, 반민족, 반현대적인 기본적으로 반동적이다. 그것을 미화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죄악이며 부도덕의 극치이다.

#### 4. 공영경제와 군사재정의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

##### (1) 공영경제의 독점 착취

위에서 서술한 대만성 식량국과 대만제당공사는 거대한 공영경제 중 두 개의 기관일 뿐 표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광업 제조업 건축업 가스업 및 상업 금융업 교통운수 통신 등을 포함한 기타 261개(1966년)의 공영기업이 있고 그것은 강대한 국민당국가자본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통칭하여 공영경제라 하겠다.

이 공영경제는 바로 국민당 전제통치의 경제자원과 물질기초다. 그것은 대만 식민지 유제를 계승하고 민생주의 이념을 모방하여 더욱 견고해졌다. 1950년대말부터 60년대말 동안 민간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공영경제 역량은 더욱더 확대되었고 민영경제를 앞질렀다. 다시 표5에서 1954년과 66년을 비교할 때 기업 수에서 보면 공영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민영은 1.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본액수면에서 보면, 1954년 공영과 민영의 총액이 비슷했지만 1966년에 이르러 공영은 민영의 1.4배에 달하고, 그 기간 공영자본은 41.4배 증가하였고 민영은 29.4배 증가하였으며, 공영의 증가는 조로 모든 기업 규모면에서 확대되었고 독점성은 더욱더 강조되었다. 이런 경향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배치되었고, 기형적인 발전이었다.

공영기업은 모든 업무의 규모가 민영기업에 비해 컸고, 모든 업무의 독점자본은, 동시에 정부기 구이기 때문에 모두 특권 지위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기업이익의 위치와 함의는 일반 기업의 이윤과 달랐다.

첫째, 그것은 일종의 독점이윤이다. 공영기업이 모든 업종의 시장에서 독점적이고 불완전한 경쟁의 과두독점이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공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이 경영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목표를 위해 복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윤의 대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셋째, 재정 공매 이익 범위와 중첩된다. 공영기업의 영업이익은 국고에 상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매이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 재정 수입의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를 차지한다.

이상의 인식에 근거하여 주요 국영기업의 수지와 손익상황을 보면, 표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63년 중앙급의 주요 26개 국영기업의 영업 상황은 그해 영업 총액 1469억원. 수입이 가장 많은 대당공사가 496억으로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은 중국석유, 대만전력, 대만비료의 순이다. 대당과 대만비료는 농민경제 착취를 담당하는 주요 기구였다. 성식량국은 성급 단위로 표에는 실려있지 않다.

손익 상황을 다시 보면 이익 총액은 386억으로 영업수입액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일반기업경영의 수준에 의거해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공영기업 독점이윤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중 역시 대당공사의 이익이 가장 큰 224억원으로 이익총액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58.0%). 동시에 영업 수익액과 비교해보면, 영업수입액의 45.2%를 차지하는 아주 많은 액수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독점이윤이며 공매이익이다.

이 수는 위에서 서술한 제당업 가공분당제의 착취성의 논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비료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해의 이익은 19억원으로 중국석유와 대만전기 다음을 차지했다. 위에서 서술한 비료 교환을 고찰해보면, 대만비료의 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장부에 나타나있는 것뿐 아니다. 이같은 상황은 성식량국도 마찬가지이다. 성식량국이 거두어들인 곡식의 수지는 실물교환이기 때문에, 대만비료의 수지와 마찬가지로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군수용 부분은 재정수지 범위에 속해 있는 일종의 군사 기밀 수지이므로, 통계자료에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공영경제의 구조는 시장경제의 독점특권을 통해, 일반대중을 착취하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마땅히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독점 특권으로 인해서 경영 효과가 약화되고, 손해가 쌓이고, 도태되는 공영기업들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26개 주요 국영기업중, 6개가 적자를 내고있고, 2개는 손익이 0이다. 여기서 시장경제를 위반하는 공영경제체제의 불합리한 면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도 어느 성급 공영기업에서는

종이가 넉넉치 않아 한장 한장 일일이 세는 형편이다. 여기서 냉전 체제하의 공영경제체제에 대한 미국원조가 맡았던 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50년대 국영기업의 주요 자금 출처는 표7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원조와 차관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차관 자금의 출처는 대부분 미국이며, 국영기업들의 자금출처 역시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자本是 공영경제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동 노릇을 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공영경제의 인민 착취 기능을 지지하는 원흉이다. 물질 기초면에서 국민당 전제공포 통치를 지원하는 '공범자'라 할 수 있고, 또한 냉전체제하에서 국제정치 범주의 공범이며, 미국의 민주 인권이라는 대외 구호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 것이다.

## (2). 군사재정의 대중착취

위에서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영경제와 재정은 떨어뜨릴 수 없다. 특히 이 시기의 군사 재정은 공영경제의 지원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데, 양식 징수 정책이나 가공분당제는 바로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며, 그 착취는 거의 가혹한 세금의 성격을 지닌다.

이 시기 대만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군사재정이다. 즉 대규모의 군사 부담이 전체 재정의 구조와 성격을 규제하는 것인데, 중앙세출의 약 80%정도를 차지하는 국방지출은 전체 세출의 내용을 좌우하고 있고, 군사세출은 세입의 구조와 특징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조세의 가혹한 착취적 성격 역시 여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세출구조면에서 재정의 면모를 살펴야만 할 것이다.

표8에서 보는 것처럼, 1950년대 중앙정부의 세출중, 국방부 지출이 전체의 약 80%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이 외교부지출로 3%, 그밖의 부서들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중앙세출은 거의 군사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도 전체 대만 재정세출구조와 마찬가지로, 표9에 의하면, 1951년부터 65년까지의 15년간, 평균적으로 중앙은 2/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국방지출이 중앙, 지방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53.9%에 해당한다. 표에서 국방정무 항목이 행정비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방지출을 제외한 정무지출은 14.3%이고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교육으로 10.9%, 그 뒤가 보안경찰로 5.5%, 경제건설 5.4%, 사회보장 3.5%의 순서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지출이 전체 세출의 절반이 넘고, 정무와 보안경찰 지출 비율이 19.8%로 국방정무와 보안경찰 두 가지 항의 지출을 군사전제통치 세출로 통칭할 때, 그 비율은 73.7%에 달하는 아주 높은 비율이며 그 다음인 경제건설의 5.4%와 사회보장의 3.5%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알다시피 이 시기의 재정세출은 최대한 군사와 공안방면에 집중되어 있고, 건설이나 사회재분배 등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상당히 기형적인 세출구조이며, 또한 바로 백색공포전제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에는 재정세입의 구조를 다시보면, 표10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의 세입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크게 조세, 기업 재산, 그리고 차관 원조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952년에서 62년까지의 평균구조를 살펴보면, 조세가 49.2%를 차지하고, 기업 및 재산수입이 26.1%, 차관 및 원조가 15.6%, 기타 9.1% 등이다. 간단히 말해서 관세, 물품세, 공매 수입과 미국원조 수입이 주요 세입 항목을 이루고 있고, 소득세 수입은 매우 적은 편으로 7.4%에 불과하다. 방위세는 국가비상시기의 특별세인데, 특히 군사 공안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과세된다.

소득세는 6.5% 가까이 되고 공영기업과 기타 재산수입 합계는 9.9%로 소득세를 초과하고 있으며, 미국원조수입에 의존하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조세수입이 반이 안되고, 소득세도 또한 많지 않으니, 세무기초가 박약하여 세입이 특수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정세입이 인민에게 주는 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 두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직접세는 인민(개인과 법인)의 소득, 재산수입에 의거해 징수하는 거싱고 간접세는 인민의 소비에 맞추어,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직접세의 성격은 소득에 의거해서, 재산의 부담능력에 따라 내는 누진세로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내는, 각 계층별로 상대적으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제이며, 많은 선진국가에서 모두 직접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인민의 실질적이고 공평

한 부담으로 인한 재부의 재분배 기능 때문에 직접세 위주의 세입은 선진 발달형으로 이야기되곤 한다. 이와 달리 간접세는 일종의 소비 유통세이므로 빈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 또는 비율을 기회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징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간접세 위주의 세제는 비교적 추정이 쉽지만, 광대한 사회 각층에 불공평한 부담을 주게 된다.

위와 같은 인식에 의거해서 대만의 세금상황을 보면, 표11과 같이 표10의 각종 세입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양분해서 그 비율을 보았을 때, 1956년-65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직접세가 19.2%, 간접세가 80.8%로 대만의 세입은 간접세 위주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상술한 공영경제의 수입은 세입상 많은 간접세로 이루어진 것이며, 직접세의 징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대만의 재정 수입은 인민대중의 부담을 중심에 두고,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불공평한 세제로 낙후된,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조세체제인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세출의 구조와 특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시기의 재정이 인민 대중의 가혹한 조세수입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고, 인민대중의 착취를 기초로 한 군사재정은 반공전제의 백색공포통치를 공고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세입구조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유통면의 간접세 징수로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동시에 재산소득수입면의 직접세 징수는 방치함으로써 부자와 공상계층에게 자본축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공상계층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동 반인민의 군사재정이 여전히 상공업 발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더라도, 민간자본의 축적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착취경제 구조로 인하여 인민대중에 의거한 국내소비시장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 1950년대 말 급속히 생산과잉의 불경기가 닥쳐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당 군사정권은 그의 전제독재통치를 정당화하고 인민생활의 방향전환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인민생활 방향전환 제고를 모색했다. 1960년대 국제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기회를 제공했고 민간자본 역시 이러한 조류에 부합하여 저임금 과잉 노동력을 결합하여 외향형 가공 수출공업의 발전을 따라 잡고, 또 다른 단계의 자본축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 5. 맺는 말 - 반동착취경제 축출의 현대 의의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백색테러기의 국민당 전제정치의 물질기초는 노동대중을 착취하는 경제를 위주로, 주요 부분인 쌀, 설탕농업을 통제, 공영 독점경제체제 및 대중을 반민주적 전기성(전근대) 낙후경제 체제이며, 역사진보의 반동이라는 것은 위의 분석들처럼, 증명되었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시기의 반동착취경제는, 설령 그 이후 대만 경제가 발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청당화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고 있다. 역사 발전은 변증적인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반동정권이 전제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려하고, 독재체도의 개발을 수립하였고, 공상계층에 대해서 방치해 두었지만, 시장경제 및 개방경제는 발전하게 되었다. 민영경제 공영경제를 압도한 것이 비로소 이후 경제성장의 기본 요인이 되었고, 공영경제의 변증적 발전을 통합하게 한 것이다. 공영을 기초로 한 반동착취경제는 대만사회 경제, 역사발전을 지연시킨 장애물이며, 절대로 정당화 되거나 미화될 수 없다.

그러나, 반동착취경제의 잔여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현재 대만 사회경제의 기형적인 후유증이 되고 있다.

정치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모두 알고 있듯이 오늘날 대만의 금권정치, 黑金사회 더 나아가서 黑(폭력), 金(자금), 權(권력)이 결합한 통치세력이 대만 민주정치 및 사회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근원은 반동착취 경제에 있다. 국민당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사업은 모두 당권의 특권에 의해서 이고, 공영착취 경제의 공과사를 구별못하는 관료자본에서부터 쌓여 온 것이다. 오늘날의 선진 국가에서는 하나의 정당이 이처럼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정당정치를 좌우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근대중국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재력구조가 형식에 있어서 민주선거의 시운(時運) 위에, 폭력세력이

결합되어 폭, 금, 권 (폭력, 자금, 권력)이 삼위일체가 된 반동통치세력이 되었고, 이것이 국민 당 정권의 전통체질로, 이는 일찍이 1930년대와 전후의 대륙 시기에 시작되어,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 대만에 남아, 대만의 정당, 정치, 민주정치의 진보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다음 경제면에서 보면, 공영과 민영경제의 두 가지 구조는 공영경제가 장기적으로 기간산업과 금융고지를 독점해 온 결과, 민간 현대 산업자본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중소형 가족경영의 발전 및 상업적인 가공수출 공업화로 국한시켰다.

오늘날 산업발전이 직면한 난국 및 대만 상인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색테러 하의 착취 경제의 국제적 의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앞에서 언급한 전제 착취경제의 정권체질 및 냉전 체제라는 3가지 요소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 필자는 냉전 체제 요소의 규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앞의 두 요소는 대만과 대륙의 특수 요소에 속하는 것이고, 냉전 체제는 일반 요소라는 것이다. 만약 이 냉전 요소가 없었다면, 백색테러 독재체제는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냉전 요소는 국제적인 원인이며 한국의 국가 테러주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냉전체제의 과실이고, 새롭게 자리 매김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만 한국국가 테러주의는 현대세계의 커다란 정치 범죄라고 여기고 있고, 냉전은 이 정치 범죄의 『원흉』, 『공범』이고 후세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